

#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방안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윤미경**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mkyun@catholic.ac.kr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bassgu@kiep.go.kr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skna@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부문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함.
- 또한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함.
-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내 산업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상품의 이동이나 노동비용 차이를 통한 제품가격 저렴화 관련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대(對)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양허안이나 한·중·일 3국이 최근 추진한 FTA 서비스 부분 양허안의 분석을 통한 부문별 자유화 수준 평가 등에 집중됨.
- 본 연구에서는 각종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이슈 외에, 주요 서비스산업별 역내투자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 서비스산업 전반의 양적·질적 발전 수준은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평가됨.
- 비교우위를 갖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로는 한국의 경우 운송서비스, 중국의 경우 해외인력공급, 일본의 경우 로열티 및 라이선스 대금 부문임.
-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는 일본은 금융·보험 부문에, 중국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금융·보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대(對)세계 직접투자 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내투자가 미흡한 부분을 보면, ①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부동산업, 임대 및 상업서비스, ② 한국의 대일본투자는 금융업, ③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금융업, ④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업 등임.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대일본 서비스 투자의 경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투자증가 추세를 주도함.

### ■ 한·중·일 3국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

-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은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임.
  - 실제 과거의 일정시점 혹은 최근 외국계기업의 진출입이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3국의 도소매업 시장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원인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폐쇄적인 시장특성

- 등 비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임.
-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사례 활성화의 경우 단지 유통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신규시장 진입 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진출전략임.
-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임.
  - 금융·보험시장의 규모는 국가별 경제성장 추이와 비슷하게 중국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함.
  - 일본시장은 오히려 경기침체 상황으로 인하여 낮은 성장률을 보이거나 비생명보험 등 일부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추세임.
-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함.
  - 한국과 중국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 건설업의 해외진출이 해당시장 진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확보 등 복합적인 정책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임.
  -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성장 추세는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됨.
  - 도소매업: 한국 및 일본 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계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일본계 편의점의 한국진출 외에는 역내기업의 진출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금융·보험업: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타 역내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건설업: 각국의 전체 산업별 투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머물고 있음. 다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체 규모는 낮지만 최근 상승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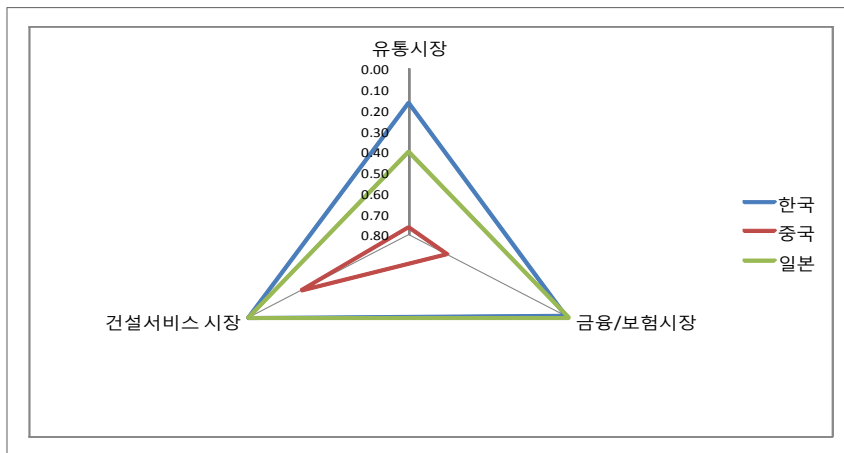
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한·중·일 3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방도 평가 비교

-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3개 분야 모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게 평가됨.

그림 1. 주요 서비스시장 개방도(규제지수) 비교



주: 유통시장은 'OECD 유통시장 규제지수', 금융/보험시장은 'OECD 금융부문 FDI 규제지수', 건설서비스시장은 'OECD 건설부문 FDI 규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지표들이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반면, 유통시장 규제지수의 경우 0에서 6의 값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규제지수를 0에서 1의 값으로 조정(6으로 나눈 값).

■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요인 비교

-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중국의 경우 지역별 진출의 어려움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불투명성(법령미비, 행정조치의 임의성 등)이 주요한 규제요인으로 제시됨.

표 1. 한·중·일 3대 서비스산업별 진입장애요인

	한국	중국	일본
도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시장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대응(현지화)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홈쇼핑 등 신규업종 규정 미비</li> <li>인허가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외국기업 차별</li> <li>약품, 담배 등 일부 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시스템의 복잡성, 유통경로의 다양성 및 폐쇄성</li> <li>제조업자의 유통지배와 유통계열화 문제</li> </ul>
금융·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경계</li> <li>금융 전문인력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시장, 생명보험시장 및 자동차 책임보험시장에의 외국기업 진입규제</li> <li>은행에 대한 예대비율 규제</li> <li>임직원 자격시험 제도로 인한 인력활용의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정공사보험의 독점적 지위</li> <li>Kyosai(상호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특혜</li> <li>방카슈랑스 규정의 체계화 미흡</li> </ul>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건설허가 소요비용</li> <li>국내시장의 각종 건설 관련 규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허가 절차의 복잡성</li> <li>외국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제한</li> <li>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에서 중국 내 사업실적만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발주체제로 인한 진입장벽</li> </ul>
공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영업의 제약(별도의 법인설립 요건 및 지역별 규정의 편차 등)</li> <li>법 규정의 체계화 미흡 및 불투명한 행정 집행(외국기업 차별)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국민의 자국 기업에 대한 '만능주의' 잠재</li> </ul>

- 중국의 경우 한·중·일 3국 중 가장 많은 규제가 존재하나, 오히려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시장의 고유특성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진입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임.

### 3. 정책 제언

#### 1) 한·중·일 공통의 협력과제

- 유통업 부문: 현재 각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면이 존재하며, 실제로 3국의 규제수준도 가장 낮은 분야라는 점에서 개방확대보다는

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보험분야: 상호 급격한 개방보다는 제한적 범위·틀 내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건설업: 각국이 자국시장의 법 규정 개선 등을 통해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단순시공이 아닌 설계,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 역량을 강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한·중·일 FTA 협상
  - 3국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소매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유도함.
  - 중국 내에 존재하는 각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 사안을 협상의제로 포함하여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함.
-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용
  - 향후 FTA 등 경제통합의 촉진 및 3국 상호간에 나타나는 각종 협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채널로 적극 활용함.
  - 초국가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음.

## 2) 한국기업의 대중국·대일본 진출 활성화 방안

- M&A 투자 활성화
  - 중국 및 일본의 대형은행 등과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을 인수하게 될 경우, 한국기업이 직접 M&A 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 경영자의 저항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형태의 인수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하여 중요 분야에 대한 인수자금을 지원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KOTRA 등을 통한 M&A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의 단기적인 수요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M&A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또한 중요함.

■ 투자지원 시스템의 정비

- 한·중·일 협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각 서비스 분야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 한국기업의 경우 낮은 지명도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기업에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신뢰할 수 있는 각국 신용정보기관 간의 업무협정이 체결된다면 담보나 보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임.

■ 도소매업 투자 활성화

- 중국: △ 내륙 및 동북지역 등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 및 지원 △ TV·인터넷 홈쇼핑 등의 미비한 관련 법령의 시급한 개선 요구
- 일본: △ 백화점 및 대형소매유통 분야보다 화장품, 식당 등 전문소매업이나 인터넷 판매 등을 중심으로 진출 활성화 지원 △ 일본 현지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나 M&A 관련 정보 제공, 시장조사 및 현지인력채용과 관련한 기업협회나 KOTRA 등의 지원 강화

■ 금융보험업 투자 활성화

- 중국: 증권업 및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 개방, 예대비율 제한 규정 완화, 직원 자격시험제도의 탄력적 운용 제안



- 일본: 한국시장과 연계하는 투자알선업무와 투자업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지원

■ 건설업 투자 활성화

- 중국: △ 건설자격 평가 시 중국 이외의 국가(한국은 제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실적을 포함하도록 개선 요청 △ 중국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활성화 지원 △ 지사 설립, 시공 허가신청, 납세 제도 등에서 지역간 격차 해소 요청
- 일본: △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 내 건설산업 규제개혁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 △ 정부 차원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에 각 발주자별로 유자격자 등록이나 입·낙찰관행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3) 서비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도소매업

- 국내 유통시장이 보다 세분화·전문화될 경우 향후 외국기업의 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소매업체들이 세분화된 가치형 소매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연구개발비용, 종업원 훈련비용 등의 기술적인 지원과 지급보증, 직접대부, 조세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 등

■ 금융보험업

- 외국자본의 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투기자금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자본의 기업  
인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자본의 증시유입 확대 등을 통해 주가상승,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본이득을 최소화함.
- 이와 같은 개선조치와 더불어 장기투자 등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 및 주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과제임.
  - 단기적으로 현재 금융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 세계에  
한국인 금융네트워크 구축, 외국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많은 수의 전문인력을 양성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인력수요의 파악·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요에 맞  
는 인력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건설업

- 건설시장의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작업 그리고 자유  
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이 보다 자유  
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건설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한 자체기술개발 못지않게 선진기술  
을 도입하는 전략 또한 중요함.